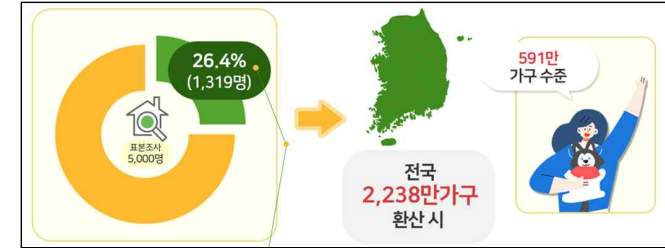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과제



조운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C&I소비자연구소 대표
반려동물 연대회의 운영위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9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으로 인해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개선 목소리가 높다. 반려동물 진료의 경우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증의 진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진료내용, 위험성, 진료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불만이나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가구 소비자피해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의 92%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진료비 과다 청구가 111건(39.1%)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 과잉진료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진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다.

[표2]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현황중 진료비 관련 상세 피해내용

순위	상세 피해내용	건수	비율 (%)
1	진료비 과다청구	111	39.1
2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	66	23.2
3	과잉진료	65	22.9
4	가격 관련	42	14.8
합 계		284	100.0

출처 : 전국소비자상담센터 2017년 1월~2019년 6월, 한국소비자연맹

2. 낮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동물병원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나 사전 미고지 등의 불만은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해소 가능한 측면이 많다. 실제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나 유기동물 증

I. 서론

1.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진료서비스 개선 요구

농림축산식품부의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수는 591만가구로 조사대상 5,000명중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57만가구에서 2019년 591만 가구로 가구수도 늘어났으며, 양육하는 반려동물 수도 개, 고양이만 보았을 때 2015년 703만 마리에서 2019년 약 856만 마리로 증가했다.

연구에 따라서는 반려동물 가구가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반려동물 수나 반려인 가구는 더 많을 수 도 있다.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6.5%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가구특성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1]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수 현황

구분	'15	'17	'18	'19
조사방식	3천명 전화조사	5천명 전화조사	2천명 면접조사	5천명 온라인조사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1.8%	28.1%	23.7%	26.4%
반려동물 양육가구(전국환산)	457만가구	593만가구	511만가구	591만가구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리수(개)	1.28마리	1.30마리	1.30마리	1.21마리
가구당 평균 양육 마리수(고양이)	1.74마리	1.75마리	1.50마리	1.34마리
전국 환산 양육 마리수(개)	513만마리	662만마리	507만마리	598만마리
전국 환산 양육 마리수(고양이)	190만마리	233만마리	128만마리	258만마리

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려동물보험이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등록동물수 대비 가입률은 1.1%에 그쳐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표3] 반려동물보험 연도별 계약건수 및 보험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약건수(건)	1,199	1,683	1,826	1,819	2,638	8,147	22,220
연간보험료 (백만원)	405	572	731	690	980	1,280	11,250
등록동물 (마리)	70만	89만	98만	107만	117만	130만	209만
등록동물수 대비가입률(%)	0.17	0.19	0.19	0.17	0.22	0.63	1.1

출처 : 손해보험협회

일본의 반려동물가입률 6%, 영국의 경우 25%, 스웨덴은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¹⁾에 비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상품규모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진료체계가 정비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동물병원마다 제각각 책정되고 있는 것을 우선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이 있다. 첫째, 종, 연령, 주요 질환별 발병률과 병원 진료패턴 등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 진료행위별 진료비와 같은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출 비율인 “손해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반려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²⁾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를 개선하여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진료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등을 도입하는 것은 동물병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II.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과제

1) 보험개발원, 「반려동물보험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 CEO Report 2018.2

2) (재)더미래연구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 2019.8

1. 진료행위·비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진료행위·비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제도란 소비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의사는 법적으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에 대해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 동물병원은 2014년 3,979개소에서 2018년 4,524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의사는 중대한 진료를 실시할 경우 동물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 및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술동의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발성에 의존하다보니 동물병원 소비자는 진료내용 및 비용에 대한 사전설명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여 농림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에 의료법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대 위해 수술에 대한 의무 부여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표4] 수의사법 개정안 (신설, 정부안, 진료행위 및 진료비에 대한 설명·동의)

제13조의2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 ①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이하 이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협하여 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 전후 동물의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예상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

③ 동물소유자 등은 수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설명, 동의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제

진료비 사전고지제는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하여 공시하여 소비자가 개별 병원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고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2016년 발표한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진 진료비가 최저가와 최고가 대비 6.7배, 재진 진료비는 약 5.3배 가격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시술되고 있는 중성화 수술비용도 수컷을 기준으로 최저 50,000원에서 최대 250,000원으로 5배나 차이를 보였다.

[표5] 진료비 차이비교

항목	품목	최저가(원)	최고가(원)	가격차(배)
진료비	초진료	3,000	20,000	6.7
	재진료	3,000	16,000	5.3
검사비	일반혈액검사	10,000	50,000	2.7
	심장사상충검사	15,000	40,000	5
	X-Ray촬영	8,000	40,000	5
접종비	DHPPL	5,000	25,000	5
	코로나장염	5,000	30,000	6
	파보바이러스	5,000	30,000	6
	켄넬코프	5,000	30,000	6
	광견병	5,000	40,000	8
치과	발치(1개당)	5,000	20,000	4
	스케일링	50,000	150,000	3
중성화 (마취비포함)	암컷	150,000	400,000	2.7
	수컷	50,000	250,000	5

출처 : 박주연 (2017)「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환경법과정책 19. pp102-103

현재 주요 진료비에 관한 공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고무줄 진료비는 소비자들의 과잉진료 우려를 낳고 있으며, 동물 진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개별 병원이 표준진료항목, 예방접종 등의 진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표6] 수의사법 개정안 (신설, 정부안,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제20조의3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진료항목, 예방접종등의 진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개별병원에서 이행하는 진료비 사전고지 외에도, 농림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제고를 위해 진료비 현황조사제 도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여러 동물병원의 진료비용(평균 비용 혹은 최저·최고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인의료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공시제의 형태이다. 농림부는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 별 평균가격, 가격범위 등을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진료비용 현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물병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일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진료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표준진료항목을 결정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표준화가 필요없는 초진료, 재진료, 백신접종료 등 단순한 진료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전고지제를 적용하고, 다빈도 진료행위 및 예방접종 등 일부 진료항목에서부터 표준화 및 코드화 해 나간다면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부 역시 다빈도 진료항목, 사회적 관심항목, 병원별 진료내용에 차이가 없는 항목 등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표준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20조의5(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수의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동향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입법과 더불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제 등에 대한 의원입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총선과정에서 여, 야를 막론하고 반려동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의지를 밝힌바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빠르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총 3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 발급을 원할 경우,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진료부에는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진료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표7]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 법안 발의 현황

발의의원(당)	주요내용	발의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0.7.15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의무화	2020.9.14
허은아 (국민의힘)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	2020.8.19
강민국 (국민의힘)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	2020.8.19

Ⅲ. 결론 및 제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보편화 되어 가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게 될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한 가계 부담이 되거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동물병원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동물 진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동물유기 등 사회문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중 사료 및 간식비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료비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등 반려동물 진료비 관

련 인프라 구축은 동물 진료비용의 예측가능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반려동물 가구에도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 진료프로토콜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반려동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보제공 등이 마련되는 것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